

지역순환 농식품체계와 로컬푸드운동

윤병선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부 경제학전공 교수
허남혁 | 충남발전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책임연구원

I. 머리말

현대의 세계농식품체계는 소수의 초국적 농식품복합체들에 의해 지배되는 식품생산구조로서, 몬산토, 카길, ADM 등의 거대 기업들이 곡물은 물론 쇠고기, 사료, 비료, 농약, 종자산업 전체에 이르기까지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 결과, 농(農)의 생산현장과 식(食)의 소비현장 사이에 물리적, 사회적, 심리적 거리가 확대되었다. 따라서 세계농식품체계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지역(순환) 농식품체계(local agri-food system)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김철규, 2009; 윤병선, 2008). 지역순환 농식품체계를 복원하는 것은 초국적 농식품복합체에 의해서 재구조화된 세계농식품체계에 대한 대안적 의미를 갖는다.

세계농식품체계에서 지역순환 농식품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략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토종종자의 복원을 통하여 초국적 종자기업이 생산하는 종자를 대신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으며, 지역단위의 자족경제 혹은 자기의존경제를 확립해 내는 것도 그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순환 농식품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여러 전략 중에서도 로컬푸드운동은 현재의 강고한 세계농식품체계의 또 다른 희생자인 소비자와 함께 전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로컬푸드운동은 생산자측과 소비자측이 서로를 생각하고, ‘농’과 ‘식’ 사이의 거리와 시간을 축소시키면서 관계를 회복하려는 운동이다. 다시 말해서 로컬푸드운동은 ‘농’과 ‘식’에 관련되는 사람들이 먹거리의 안전과 안심을 위해서 접근하고 ‘얼굴이 보이는 관계’와 ‘신뢰관계’를 찾아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결집을 가능하게 하는 운동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로컬푸드운동이 가지고 있는 생태성, 복지성과 함께 관계성에 대한 구체적 의미를 찾아내고, 이를 통해 로컬푸드운동의 전략을 보다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로컬푸드운동은 지역내 자원을 상호간의 돌봄과 책임감이라는 관계 속에서 지역경제의 연결고리를 통해 유통시키는 운동이다. 관계에 근거한 교환은 지역자원의 사용을 활성화시켜서 자기의존성을 더욱 높여 지역경제를 활기차게 만든다. 따라서 로컬푸드운동은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소비하는 이른바, 지역생산, 지역소비를 기초로 하면서 “농림어업이나 지역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의 소생으로 연결되고, 소농에게 활력을 주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또 얼굴이 보이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협동과 신뢰관계하에서 먹거리의 안전과 먹거리의 지역자급력을 높여서 먹거리의 지역성을 풍부하게 하고, 지역

사회를 활성화한다”(池本廣希, 2008). 즉, 로컬푸드운동은 지역전체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과 살아있는 생물 모두를 소생시키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작년 6.2 지방선거에서 핵심적인 이슈 중의 하나로 로컬푸드시스템의 구축과 학교무상급식이 부상하였고, 이를 주요공약으로 내세운 후보들이 많은 지역에서 대거 당선되었다. 이에 따라 로컬푸드시스템의 구축이나 무상급식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들이 입안되고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이들 정책이 가지고 있는 파급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론도 존재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지역순환 농식품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로컬푸드가 활성화되어야 할 당위성을 살펴보고, 지역순환 농식품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과제 및 그 전략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 지역순환 농식품체계 도입의 필요성

1. 지역농정의 비중 증대

WTO 체제 출범이후 농정에서 시장기능이 강화되면서 각 나라들은 정부의 개입을 축소하고 시장기능을 강화하며 직접개입에서 간접개입으로 변화하였다. 이는 그간의 농업지지 정책으로 인한 농산물 과잉생산과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농산물 시장수급 및 수급에 대한 정부개입을 축소하고 대신 농가에 대한 직접소득 지분을 확대하고 환경과 농촌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었다.

농산물 가격지지나 소득지지 정책 등 전통적인 농업정책은 기본적으로 중앙집권적일 수밖에 없으나 농정의 대상이 농업구조개선, 나아가서 환경보전이나 농촌지역 활성화로 확대되면서 농촌지역정책은 기본적으로 지방분권적 성격이 강화되고 있다. 농업·지역·환경을 포괄하는 통합적 농촌정책으로 인해서 중앙집권적인 농업정책의 상당부분 권한과 예산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역의 여러 주체들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이미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국가전체 예산의 52% 이상을 집행하고 있다.

지역농업의 활성화는 주체인 농민의 입장과 지역농업의 생산성 향상, 지역발전 기여라는 세 가지 추구목표에 근거한 과제를 정리한다면 크게 네 가지 분야의 과제로 분류할 수 있다(박진도, 2009).

첫째는 지역역량 강화로, 이는 자치단체의 농업정책기능 강화와 농민을 비롯한 주체들의 역량강화로 나눌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정책기능 강화는 중앙정부 사업집행의 효율성이나 충실성에 대한 문

제가 아니라 지역특성과 조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기획·집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지역농업을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지역농업의 제 주체가 참여하는 지역농업정책 협의구조를 마련하고 지역 주체간 이해관계와 갈등을 공익적 방향으로 관리해야 한다.

둘째는 지역농업 생산성 향상이다. DDA, FTA 농업협상은 다수의 품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역의 주 재배작물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고 있다. 따라서 지역에서는 이러한 피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는 인위적인 농산물 생산조절보다 가격폭락에 대한 일정수준의 지원 등을 통해서 농민들의 영농의욕을 고취하면서 주요품목을 중심으로 복합적인 영농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견인하여야 한다.

셋째는 조직화의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농가 당 평균 영농규모는 1.5ha 미만으로 영세하고 분산되어 있다. 따라서 이미 실패한 개별농가의 규모화정책보다는 개별농가 또는 마을단위의 협업적 형태, 다양한 생산자조직 육성을 통한 범위의 규모화로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의 정책이 필요하다. 넷째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및 가공품의 지역내 소비확대를 위한 구조를 만들어 내는 문제이다. 이는 농산물 개방의 영향을 지역적 차원에서 최소화하면서 지역농업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와의 물리적 거리, 사회적 거리라는 괴리를 극복하고 상호 신뢰관계 회복과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공동의 인식마련, 사회적 비용감소 등 긍정적 효과를 증대시킨다.

이상의 과제들은 서로 독립적이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있어 상호보완적인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책추진도 지역 전체의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과제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역사회의 합의, 정책효과의 극대화, 지속성이라는 측면에서 가능한 범위에서 조례제정을 통한 제도화가 필요하다. 실제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농업·농민지원 관련 지역조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로컬푸드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준비하고 있다.

2. 지역순환 농식품체계의 의의

지역순환 농식품체계는 가능하면 지역에서 생산한 것을 지역에서 소비하기 때문에 ‘얼굴을 볼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내고, 이를 전제로 한 생산과 유통이 성립하게 된다. ‘얼굴을 볼 수 있는 관계’, 즉 먹거리를 통한 신뢰관계의 형성은 먹거리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으며, 느슨한 형태이긴 하지만 가장 믿을 수 있는 이력추적시스템이라고도 할 수 있다(윤병선, 2008). ‘얼굴을 볼 수 있는 관계’의 구축은 그 어떤 품질기준에도 뒤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산농민은 소비자의 요구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永木正和(2008)는 일본의 로컬푸드운동의 표어로 ‘관계성

의 경제'를 제안한다.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관계, '팔고 싶다', '사고 싶다'는 양자의 의사가 일치하여 매매가 이루어지고, 로컬푸드운동을 통하여 사람과 사람의 지속적인 관계가 만들어 진다는 것이다. '관계성의 경제' 실현은 사회를 안정시키는 시스템으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경제학은 생산자(생산)와 소비자(소비)를 대립개념으로서 파악해왔지만, "생산은 자원을 소비하고, 소비는 생명을 재생산한다"고 파악한다면 생산과 소비는 하나라고 할 수 있다(池本廣希, 2008: 56). 예를 들면, 농업생산자는 농약사용을 감소시키려고 노력함으로써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고, 소비자는 안전한 먹거리를 먹으면서 자신의 건강을 지키면서 동시에 농가의 생활을 지켜준다는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으며, 이는 농가와 소비자사이에 '대립관계'가 아닌, 서로가 생활과 건강을 지키는 '공생관계'로 연결된다. '대립관계'는 '돈과 가격'을 매개로 이루어지지만, '공생관계'는 '생활과 건강'이 관계를 맺어주게 된다. 이러한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신뢰관계는 조직간의 신뢰관계로 연결되어 '협동조합간 협동'을 실현한다는 사회적 의의도 갖게 된다.

지역순환 농식품체계의 확산이 가져올 장점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농업은 토지와 물과 같은 자연을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하기 때문에 생산의 지속성과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환경허용량범위 내에서 생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래 농업은 폐기물이 적게 나오고, 나오더라도 재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절한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면 환경에 대한 부하를 줄일 수 있는 산업이다. 그러나 현재의 대규모 단작화되어 있는 녹색혁명형 공장식 농업생산은 환경허용량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지역순환 농식품체계를 확립한다는 것은 다품종 소량생산이 전제가 되는 것이므로 환경보전과 먹거리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지역순환 농식품체계는 소규모 생산자인 소농들의 제후에 의해서 구축될 수밖에 없다.

소비에 있어서도 생산된 농식품이 지역에서 소비될수록 환경부하도 줄어들게 된다. 생산된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것이 지역의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나아가 국가의 자급률도 높이게 될 것이다. 로컬푸드운동은 반생태적인 단작추세에 맞서는 것이기도 하다. 로컬푸드운동을 통해 지역순환 농식품체계가 확립되면 지역의 작물다양성이 유지되고, 값비싼 농화학 자재와 다른 투입자재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작물다양성은 식단을 다양하게 해 줄 뿐만 아니라, 지역농민과 다양한 먹거리 관련 산업의 생존을 보장해 준다.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생태계가 일반적으로 생산성도 더 높고 안정성도 더 큰 것처럼, 좀 더 다양한 식단이 영양상의 교란이 자져오는 나쁜 영향에 대해 일종의 완충 작용을 한다. 작물 다양성은 값비싼 농화학비료를 비롯한 여러 농자재 의존을 줄이고, 주요 해충발생이나 기후변동에 대항하는 복원력을 제공한다. 구입 농자재에 덜 의존하고 농지의 생태적 과정이 주는 장점을 더 많이 이용하는 생태적이고 다각적인 유기농이 화학물질 집약적인 단작보다 유지비용이 덜 들고 농지, 영양분, 에너지 사용이 더 효율적이며, 장거리 먹거리 체계에서 소외되어 온 도시민들이 먹거리를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하다.

또한, 지역순환 농식품체계는 고용창출과 지역자원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다. 로컬푸드를 이용하면 지역에 많은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데, 농민장터와 지역민 소유상점에서 지역 농산물을 구매하면, 지출된 돈이 지역사회에 잔류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올리는 선순환을 만들어 낸다. 또한, 농업을 통한 지역사회의 신뢰관계 구축은 사람사이의 관계를 활성화하여 지역을 보다 활기차게 만들 것이다. 로컬푸드 운동에는 규모와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전업농가뿐만 아니라 겸업농가도 주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작을 포기하는 휴경지의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 지역전체로서는 외부로의 화폐유출을 막아 지역내 소득의 향상을 가져와서 지역경제에 공헌한다. 아울러 여성이나 고령자가 농산물가공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고용기회가 창출된다. 필연적으로 지역의 일을 일상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도 많아져서 지역의 활력강화를 가져오고, 이것이 농업후계자의 육성이나 지역농업의 진흥으로 연결된다.

일본의 로컬푸드운동은 지산지소(地產地消)의 이름으로 순환형사회의 창조와 먹거리의 지역자급률의 향상, 직매소의 진흥, 슬로푸드나 식농(食農)교육의 추진, 유기농산물의 추진과 먹거리의 안전 등을 구체적인 목표로 내걸고 있다. 학교급식에 지역산 식자재를 사용함으로써 지역의 교육력 향상과 세대간 교류도 가능하게 하고 있다. 학생들은 지·덕·체와 함께 식교육, 즉 먹거리교육을 통하여 지역의 산업이나 역사, 문화, 전통을 배우는 기회도 얻게 된다. 일본의 산지직매소에서 지역농산물 취급비율은 70%에 이르고, 그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Ⅲ. 지역순환 농식품체계구축을 위한 과제¹⁾

1. 로컬푸드 유통주체의 건설

대부분의 농민들은 관행화된 유통체계에 익숙해져 있어서 영농부분에 자신의 시간 대부분을 노동에 할애하여 상인조직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따라서 유통 분야까지 자신들이 담당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다. 또한 소비자의 요구를 맞추기 위해 다품목 소량재배를 할 경우 단작재배에 비해 노동력 투입이 많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 유통과정까지 농민의 책임하에 두게 된다면 로컬푸드운동은 힘들게 된다. 더욱이, 개별 농민은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에서 재고나 반품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대응능력이 떨어지고 물류비 등과 관련된 사업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통분야까지 직접 감당하기가 어

1) 윤병선 · 우장명 · 박대호(2010).

럽다. 따라서 로컬푸드의 취지를 살리자면 농민과 소비자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예를 들면 농민들이 어려워하는 배송과 주문 관리 부분에서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 운영하고 금전적 거래는 생산농민과 소비자가 직접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전북 완주군의 경우, 소비자가 신뢰할 만한 농식품의 기획생산체계 구축 및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가공-저장-포장 등의 물류시스템의 확립과 생산자-소비자간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해 로컬푸드사업단을 설치하고, 로컬푸드지원센터를 만들었다. 이 센터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채소류와 복분자, 표고버섯 등 친환경 농산물과 간장, 된장, 청국장, 메주 등 재래식 방법으로 만들어진 가공식품 등을 관내 기업과 학교,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관내 기업과 학교 등에서 요구하는 농산물과 가공식품 등의 일부를 기획생산하고 지원하는 역할도 할 예정이다. 더욱이 완주군은 로컬푸드지원센터를 생산과 소비를 연계하는 사회적 기업모델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전여농이 추진하고 있는 ‘우리텃밭’ 사업의 경우에도 ‘얼굴 있는 생산자와 마음을 알아주는 소비자가 함께 만드는 먹거리 사업단(우리텃밭)’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을 사회적 일자리라는 형태로 확보할 수 있었기에 수월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농촌지역의 생산주체들을 조직하는 작업이나 도시소비지역의 소비주체들을 조직하는 작업을 사회적 일자리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다.

따라서 충청남도도 유통과정을 담당할 수 있는 주체를 설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각 시군의 유기 농산물과 특산품을 선별하여 정기적인 장터를 개설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지원사업단은 지자체와 소비자단체, 농민단체, 관련기관, 유관단체 등이 모두 참여하여 협의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제로 운영할 수 있다.

2. 지역내 네트워크의 강화

로컬푸드운동은 지역내의 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의 대면적 관계를 확대하여 농업경영의 안정과 식탁의 안전을 도모하는 운동이고, 농민시장은 이러한 대면적 관계를 확대시키는 주요 장소가 될 수 있다. 농민시장에 참여한 시민들은 농민들 자신이 재배한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모습에서 더 큰 신뢰를 갖는다.

소비자들은 농민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산물은 신선하고 값도 싸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품목수의 부족, 소포장의 결여, 한정된 개장시간 등에 의하여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또한 농민시장이 농산물 직거래 장소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여 여러 가지 불거리와 먹거리가 다양해지기를 희망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농민들은 소품종 대량 생산 방식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농민시장에 다양한 농산물을 출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농민들의 조직화가 필요하다.

농민시장 운영에 지자체가 결합되면 지역내의 네트워크가 강화될 수 있다. 충남 서천군 마서면의 생산

자 직거래장터인 ‘마서동네장터’는 매월 두 차례 열리고 있는데, 민·관·군(마서새마을협의회, 서천군지역혁신협의회, 마서면사무소) 협력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장터에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안전하고 신선한 지역농산물 및 가공품만을 판매하고 있으며, 문화공연과 건강진료 상담실 등을 운영하면서 공동체문화의 장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윤병선·유학렬, 2009).

충남 천안시는 천안시청과 천안시교육청, 농협중앙회 천안지부,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천안시연합회, 도시아파트 부녀회와 농촌마을부녀회가 공동으로 천안시 지산지소(地產地消)운동을 펼치고 있다(김종덕, 2009). 그러나 두 지역 모두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와의 결합력은 다소 떨어져서 시간이 지날수록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지역내의 네트워크화작업은 생산자조직과 소비자조직의 활성화와 양 조직간의 협동 강화, 그리고 이를 지자체가 지원해 주는 형태의 지역거버넌스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농민시장에 대한 정보를 지역신문이나 지역방송이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면 더욱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농민시장이 가지고 있는 품목의 다양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용시민에게 사전에 수확 스케줄을 알려주는 작업도 필요하다. 품목의 다양성 부족은 상대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미리 시장에 출하될 품목들을 알려준다면, 소비자들은 계획적인 구매를 할 수 있다. 일본은 시청이나 지역단체에서 수확 캘린더를 작성하여 배포하기도 하며, 미국도 소책자로 지역의 생산농가나 판매점, 지역농산물을 활용하는 음식점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로컬푸드운동은 가능하면 지역의 많은 유통업체나 식당의 참여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윤병선, 2009). 새로운 유통시설을 갖추기 위한 초기투자비용을 줄이면서 로컬푸드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일본 나가노(長野)시에서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산물 및 가공품의 일정량을 취급하는 직매소·소매점·양판점, 숙박시설·음식점 식품가공사업자 등에 대하여 ‘지산지소협력점’으로 지정해서 이들 업체에 지역농산물의 판매 및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3. 학교급식에서 로컬푸드의 적극적인 활용

지역농산물을 지역의 단체급식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은 국내의 여러 지역에서 시도되고 있다. 지역의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의 급식 재료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이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외국에서는 학교급식을 지역순환 농식품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디딤돌로 활용하고 있다. 로컬푸드운동을 지산지소운동으로 펼치고 있는 일본에서는 지역농산물을 학교급식의 식재료로 제공하는 것을 제도화하고 지자체의 교육위원회에서 이를 강제하고 있다. 2006년 3월에는 지산지소를 통해 학생들이 올

바른 식습관을 갖도록 하고, 농업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먹거리교육(食育)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2008년 6월에는 ‘학교급식법’을 개정하여 학교급식에서 지역농산물을 활용하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법은 2007년 학교급식에서 지역농산물의 사용 비율은 23.3%이었으나, 2010년까지 30%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정책목표로 삼고 있다.

청주·청원의 농민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농민들도 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처로 학교급식 등 지역의 공공급식과 로컬푸드의 연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이미 전남 나주시는 2003년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한 이후 로컬푸드협의회를 구축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학교,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급식모델을 만들고 있다(김홍주, 2009). 또한, 경남 교육청에서는 지역생산이 가능한 품목을 중심으로 한 ‘표준식단’을 작성하고, 전통 식문화계승을 위한 장독대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원주시도 2011년까지 관내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교 급식에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쌀을 지원하고, 채소류처럼 저장에 불안정한 품목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만들면서 급식지원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학교급식 등과 같은 단체급식소나 외식업체들이 지역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법령에 포함되면 지역농산물이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편, 2009년 4월 29일에 통과되어 11월부터 시행되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는 지역 농수산물 소비촉진이 목적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를 지역순환 농식품체계의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V. 지역순환 농식품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

비키 손탁(Sonntag, 2008)은 로컬푸드운동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로컬푸드’에 대한 이해의 공유, 운동 목표의 명확한 설정, 관계에 기초한 먹거리순환체계의 확립, 중소규모의 농가에 대한 중점지원, 적절한 유통체계와 공공정책의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전략과 관련하여 일본을 비롯한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면서 한국의 로컬푸드운동의 전략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지역’ 범위에 대한 이해의 공유

로컬푸드운동은 일정한 지리적 거리 안에서 먹거리의 생산과 가공, 소비와 폐기가 이루어지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운동이지만, ‘지역’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는 다분히 논쟁적인 부분일 뿐만 아니라, 운동의 전개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윤병선, 2008). 로컬푸드운동에서 ‘지역’은 생산자들

이 직접 자신의 생산물을 소비자나 소매업자에게 가지고 가서 기꺼이 판매하려는 거리에 의해서 정의되기도 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 위치에 의해서 규정되어질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하루 운전 거리’로 정의되기도 한다. 따라서 ‘지역’에는 고정된 중심이 없고, ‘지역’은 지역사회에 대한 전망으로부터 겹치는 많은 지역들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로컬푸드는 단지 먹거리의 이동거리를 의미하는 푸드마일에 관련된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땅을 온전하게 회복하는데 기여하고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넣는 관계의 발전을 위한 가능성”으로 지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로컬푸드운동에서 ‘지역’은 주로 행정구역에 의해서 규정되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 ‘지역’이 행정구역에 의해서 규정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이는 위로부터 편제된 또 하나의 유통체계로 지역순환 농식품체계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로컬푸드운동에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그동안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대규모 특화에 기초한 지역브랜드의 창출에 전념해 왔기 때문에 아직은 로컬푸드운동의 지향점에 대한 인식이 매우 일천한 상황이다. 따라서 로컬푸드운동이 국내산 농산물의 이용확대를 추진했던 ‘신토불이운동’의 범위가 축소된 형태로 폄하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로컬푸드운동은 현재의 세계농식품체계를 주도하고 있는 초국적 농식품복합체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항하는 이론과 운동목표를 갖지 않으면 안된다. 단순히 로컬푸드의 이용이라는 소극적 형태로는 진정한 의미의 지역순환 농식품체계를 복원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아울러 현재의 대규모 단작에 의거하고 있는 녹색혁명형 농업에 의존해서는 도달할 수 없다(윤병선, 2007). 더욱이 현재 한국의 농업생산구조는 지역적 특화에 기반을 둔 대규모 단작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먹거리에 대한 지역의 수요와 공급은 지극히 비대칭적이다. 따라서 지역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편제를 넘어선 ‘지역’의 확대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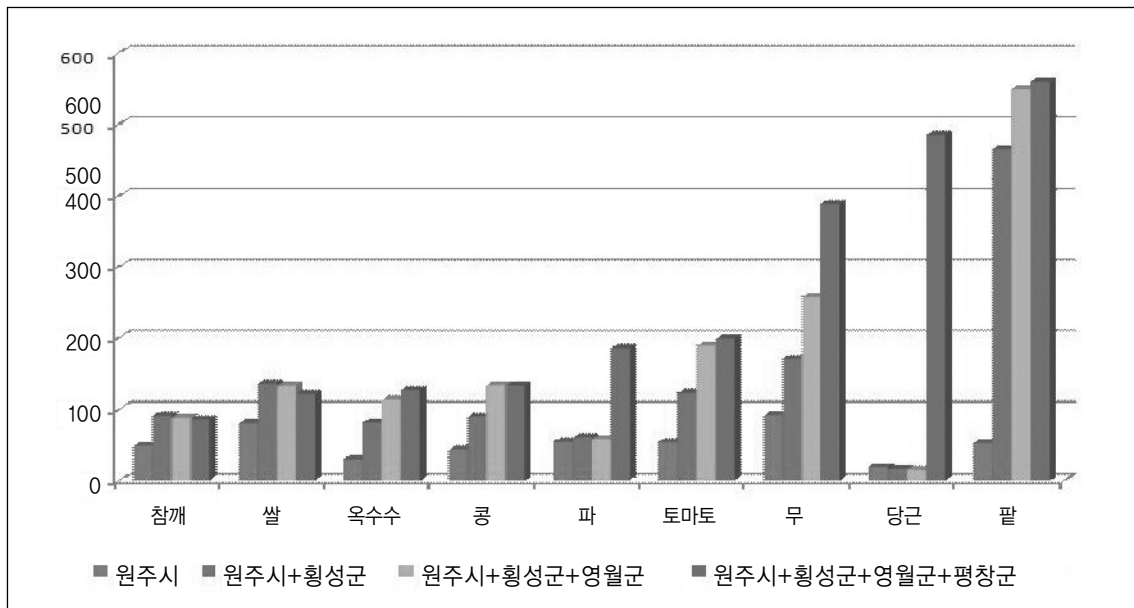
예를 들어 원주시의 경우, 원주시에서 생산한 농산물만으로도 자급할 수 있는 품목은 고구마, 감자, 시금치, 오이, 고추, 배, 복숭아 정도에 불과했는데, 인근 횡성군까지 포함해서 자급률을 계산할 경우 쌀, 팔, 배추, 양배추, 호박, 토마토, 무 등을 자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를 품목별로 보면 쌀은 원주시에서만 생산된 것으로는 자급할 수 없으나, 횡성군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자급수준을 넘어서고, 콩의 경우는 원주시 자급률은 42.7%이지만, 횡성군까지 포함할 경우 90%에 달하며, 여기에 영월군까지 포함하면 133%를 넘어선다. 팔의 경우는 원주시 자급률이 52.2%이지만, 횡성군까지 포함하면 465%에 이른다.²⁾

그렇기 때문에 로컬푸드 운동에서는 ‘관계성’에 주목해야 한다. 심지어 일본의 로컬푸드운동인 지산지소운동에서는 도시의 소비자가 농촌의 직매소나 음식점을 방문하여 농산물을 구매하는 행위도 로컬푸드

2) 원주시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우리 지역’의 범위에 대해 물리적 거리 보다는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로컬푸드운동에서 ‘지역’의 범위에 대해 80% 이상의 소비자가 ‘원주시 관내’ 및 ‘강원도 지역 중 원주 인접 시군’으로 응답하였다(우영균 · 윤병선 · 김용우, 2009).

운동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소비자들이 지역을 초월해서 안전한 농산물을 찾아 방문하는 것에 더해, 심리적인 거리를 축소하려는 측면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또한, 도시의 소비자가 농촌의 시민농원에서 농사를 짓는 경우나, 농촌의 산지가 아닌 도시에 매장을 내는 것도 산지측이 스스로의 거리를 축소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과 그 매장에 온 소비자가 그 산지를 ‘자신들의 산지’로 인식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로컬푸드운동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그림 1〉 원주시의 지역적 범위 확대에 따른 농산물 자급률 변화



충남도의 농축산물 품목별 자급률을 보더라도, 가장 낮은 밀(1.3%)에서부터 가장 높은 생강(1,835%)에 이르기까지 그 편차가 매우 크다. 농산물이 자연적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지역별로 생산량의 편차가 크다는 점을 전제로 하더라도 이처럼 지역자급률이 편차가 큰 이유는 그동안 농정의 중심이 대규모 특화 또는 지역별 주산단지화에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농산물을 지역에서 생산하고자 하는 지역순환 농식품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단작의 극복이 장기적으로는 필요하겠지만, 현재의 여건을 감안할 때 물리적 또는 지리적인 경계에 바탕을 두고 지역순환 농식품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농업생산기반을 갖추지 못한 대규모 수요처인 수도권 농산물공급을 염두에 둘 때, 농업생산지역의 품목별 지역자급률은 100%를 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가능하면 지역자급률을 높이는 전략품목의 선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인근지역과의 제후에 의한 공급전략도 필요하다.

〈표 1〉 충청남도의 농축산물 품목별 자급률과 특화계수(2008년 기준)

	구분	1인당 1일 소비량(g)	충남도 연간 소비량(t)	충남도 생산량(t)	자급률(%)	특화계수
곡류	밀가루	89.28	66,927	896	1.3	0.0
	쌀	236.23	177,086	896,000	506.0	1.3
	보리쌀	2.99	2,241	348	15.5	0.0
	옥수수	72.34	54,229	1,308	2.4	0.3
서류	감자	24.89	18,658	9,778	52.4	0.6
	고구마	13.73	10,292	15,517	150.8	1.1
두류	콩	21.02	15,757	12,531	79.5	0.6
	팥	1.69	1,267	323	25.5	0.4
	녹두	0.45	337	85	25.2	0.4
특용 작물	땅콩	1.70	1,274	1,477	115.9	1.2
	참깨	0.89	667	1,332	199.6	0.6
	들깨	1.02	765	5,091	665.8	1.5
채소류	무	51.57	38,659	131,916	341.2	0.7
	당근	7.57	5,675	1,160	20.4	0.1
	배추	99.59	74,656	283,154	379.3	0.6
	양배추	12.74	9,550	18,282	191.4	0.7
	상추	6.28	4,708	9,757	207.3	0.4
	파	20.09	15,060	45,190	300.1	0.9
	생강	0.45	337	6,190	1835.0	3.0
	양파	46.61	34,940	18,004	51.5	0.1
	마늘	17.84	13,373	29,771	222.6	0.7
	오이	17.54	13,149	66,774	507.8	1.0
	호박	15.36	11,514	46,646	405.1	0.8
	시금치	3.63	2,721	2,419	88.9	0.1
	토마토	20.35	15,255	110,099	721.7	1.9
	건고추	4.68	3,508	12,431	354.3	
	풋고추	11.32	8,486	21,515	253.5	0.8
	수박	25.86	19,386	241,210	1244.3	1.9
	참외	7.95	5,960	904	15.2	0.0
	딸기	8.54	6,402	49,835	778.4	2.0
과실류	사과	18.13	13,591	51,156	376.4	0.6
	배	18.47	13,846	106,361	768.2	1.6
	포도	13.39	10,038	32,936	328.1	0.9
	복숭아	7.89	5,915	10,835	183.2	0.4
육 류	쇠고기	19.9	14,918	32,771	219.7	
	돼지고기	50.67	37,984	202,080	532.0	
	닭고기	19.20	14,393	59,914	416.3	

주) 소비량=식용+가공용+종자용+감모량

2. 운동대상으로서 로컬푸드에 대한 이해의 공유

로컬푸드운동의 대상 먹거리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로컬푸드운동은 단지 푸드마일의 축소만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온전하게 회복하는데 기여하고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넣는 관계의 발전을 위한 가능성”으로 규정해야 한다. 로컬푸드운동은 세계농식품체제하에서 인위적으로 창출된 녹색혁명형농업, 환경파괴형 농업, 순환파괴형 농업을 극복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현재 관행농업의 경제적, 사

회적, 생태적 문제점 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다면 로컬푸드운동은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로컬푸드운동의 대상 먹거리는 친환경적으로 생산된 먹거리이어야 하며, 최소한 현재는 로컬푸드운동의 대상에 관행농업으로 재배한 먹거리를 포함시키더라도 일정한 유예기간을 둔 후에는 친환경적으로 생산된 먹거리만을 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일본 나가노(長野)현은 지산지소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농산물 인증제도를 만들었는데, 여기에서는 나가노현에서 생산된 모든 농산물을 인증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화학비료 및 화학합성농약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다. 즉,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나가노현의 생산자가 일정한 재배방법에 따라 생산하는 농산물을 인증함으로써 나가노현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의 확보, 유통의 원활화 및 브랜드화를 꾀하고, 생산자의 환경에 대한 인식의 개발을 도모하고, 지구온난화대책과 저탄소사회의 실현 등을 고려하여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농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화학비료 및 화학합성농약에 대하여 ‘지역관행시비량’ 및 ‘지구농약사용회수’의 50%이상을 삭감한 방법으로 생산한 농산물을 인증대상으로 한정하면서 당분간은 30%이상의 삭감도 인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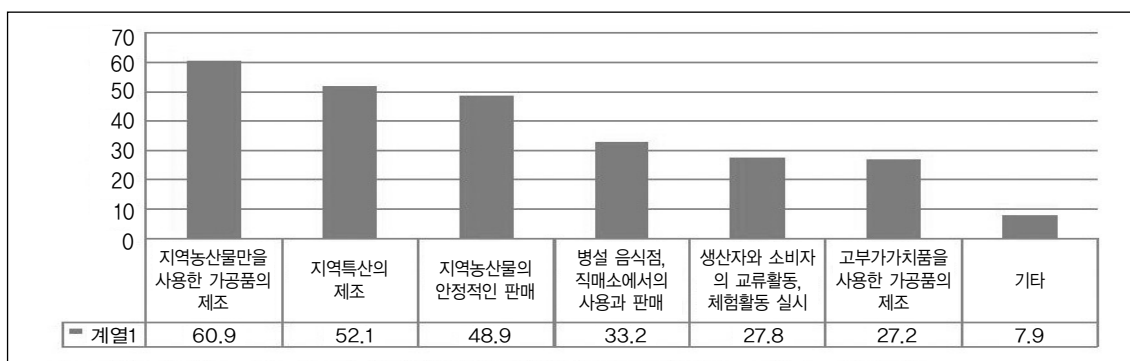
한편, 로컬푸드에 대한 인증과 관련하여 로컬푸드를 취급하는 장소(판매점, 식당)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로컬푸드운동을 운동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가능하면 지역의 많은 유통업체나 식당의 참여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일본의 여러 지역에 이루어지고 있는 협력점 인증제도를 한국 내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나가노(長野)시의 지산지소 협력점 지정제도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산물 및 가공품을 일정량 취급하는 직매소·소매점·양판점·숙박시설·음식점, 식품가공사업자 등에 대하여 ‘지산지소협력점’을 인정하는 제도로 2008년 현재 직매소는 12곳, 양판점은 11곳, 호텔·여관·음식점은 46곳, 식품가공사업소는 8곳이 지정되어 있다. 지산지소 협력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나가노시 지산지소추진계획’의 취지에 찬동하면서 인정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광고 등의 미디어로 소개하고, 또 소개되는 것을 승낙하는 사업소이어야 하며, 직매소의 경우 나가노시 지역산을 판매하는 매장면적이 15㎡ 이상으로 연간영업일수가 100일 이상이어야 하며, 소매점은 나가노시 지역산을 판매하는 판매대의 면적이 1㎡ 이상, 200일 이상 설치되어야 한다. 양판점의 경우, 나가노시 지역산 매장을 3㎡ 이상 상설하고, 나가노시 지역산을 판매한다고 표시해야 한다. 호텔, 여관, 음식점 등은 요리의 재료로서 나가노시 상품을 연중 사용하고, 메뉴 등에 표시를 행해서 홍보해야 한다. 식품가공사업자의 경우는 나가노시 지역산을 100%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상품이 1개 품목 이상이어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3. 관계에 기초한 푸드체인(Food Value Chains)의 창출

농산물가공에서 지역산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농업소득유발효과는 높아지게 된다(윤병선, 2008). 1차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사업은 그 부가가치가 생산자에게 귀속됨으로써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농산물이 과잉 생산되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등외품을 가공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농가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농산가공사업은 농촌의 고령인구나 여성노동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농산물 그대로는 부패 변질되어서 오래 저장할 수 없으나 건조, 염장, 당장 또는 통조림·병조림 등으로 가공 처리하면 장기간 저장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생체로 판매할 수 없는 규격외품도 가공원료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가공은 저급품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이 된다. 저장성이 낮은 채소나 과일이 수확기에 가격이 하락할 때 일부를 가공·저장하여 판매하면 수확기의 출하량 조절을 통하여 가격하락을 완화할 수도 있다.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활용하여 사료나 비료로 이용한다면 외부자원에 대한 의존도도 낮출 수 있다.

일본의 지산지소운동에서 전개되고 있는 지역농산물가공활동은 주로 “지역의 농산물만을 사용한 가공품의 제조”, “지역특산품의 제조”, “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매”에 목적을 두고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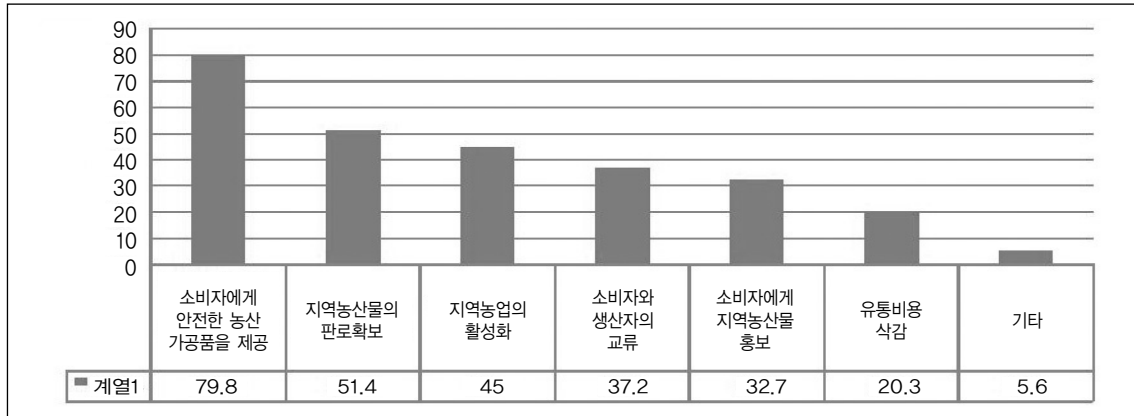


〈그림 2〉 지역농산물가공활동내용(단위: %, 복수응답)

자료 : 農林水産省, [平成16年度農産物情地産地消等實態調査の概要], 2005.5.

또한, 지역농산물가공활동의 효과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가공품을 제공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이와 함께 지역농산물의 판로확보 및 지역농업의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응답도 많이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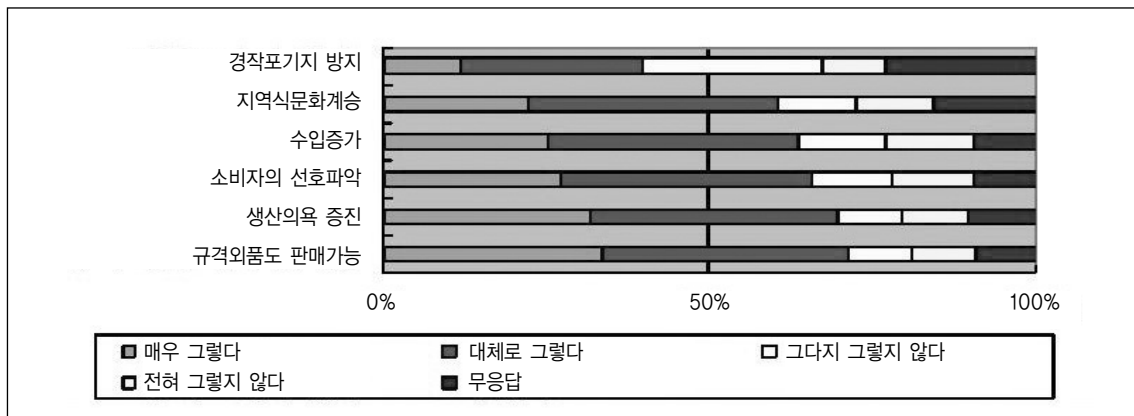
3. 지역순환 농식품체계와 로컬푸드운동



〈그림 3〉 지역농산물가공활동의 효과(단위: %, 복수응답)

자료 : 위와 같음.

아울러, 관계에 기초한 푸드체인의 창출은 중소규모의 농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순환 농식품체계의 발전은 주로 중소규모의 농가가 중심이 되어 지역시장에 보다 깊게 관계를 맺는 독립적인 로컬푸드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는 농민을 대상으로 지산지소운동이 영농활동에 미친 영향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그림 4).



〈그림 4〉 지산지소운동이 영농활동에 미친 영향(농민대상)

자료 : 農林水産省, [平成18年度農林水産情報交流ネットワーク事業 全國アンケート調査], 2007.3.

농민장터나 지역사회지원농업(CSA: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지산지소운동에서 보는 것처럼 외국의 로컬푸드운동은 중소규모의 농가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농정의 중심축에 대규모 전

업농육성정책이나 대기업의 농업진출정책은 로컬푸드운동과는 양립할 수 없다. 또한 지역농산물을 학교에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나 지역의 대규모 급식업체에서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이용하는 작업도 관계에 기초한 푸드체인을 창출해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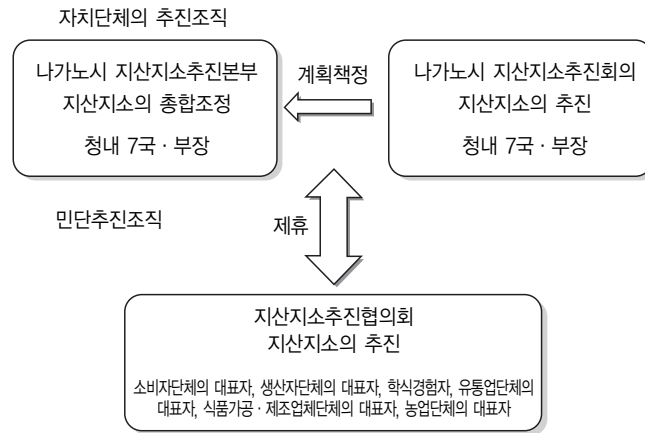
이러한 점에서, 이번에 개소하는 '충남농어업6차산업화센터'는 중소농가나 생산자조직이 중심이 되어 2차산업(가공)과 3차산업(판매, 관광, 서비스)을 융합하는 6차산업화를 통해 경제적, 사회적 부가 가치를 지역에서 창출하는 활동들을 지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6차산업화센터' 내에 하나의 독립부서로 만들어질 '로컬푸드 지원부서'는 이러한 6차산업화나 지역직거래를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소비처)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매개자 역할을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충남 지역에서 로컬푸드를 기반으로 하는 6차산업화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공공정책의 수립

마지막으로, 로컬푸드운동을 옹호하는 공공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지역먹거리정책협의회(local food policy council)등을 통해서 지역순환 농식품체계를 만드는 협력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로컬푸드운동의 궁극적 목표는 지역의 먹거리 자립에 입각한 지역순환 농식품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므로 농업생산의 지속가능성과 분리될 수 없다. 따라서 생산과정과 유통, 가공, 소비분야에서 인간의 삶과 환경에 이로운 유통, 가공, 소비 활동을 통해 세계농식품체계에 대항하는 운동이다. 따라서 지역순환 농식품체계가 올바르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생산농민이나 소비자뿐만 아니라 먹거리를 매개로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먹거리정책협의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일본의 일반적인 로컬푸드운동의 추진체계는 추진본부, 추진회의, 추진협의회로 구성된다. 나가노시(長野)현의 경우, 추진본부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내부 국(局)간의 종합적인 조정을 하는 기구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주된 역할은 운동의 계획책정이나 진행관리 역할을 한다. 추진회의는 추진본부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관계과장 등으로 구성되는데, 주로 담당하는 역할은 사업의 계획이나 추진과 관련된 것이다. 추진협의회는 운동의 추진과 충실을 목적으로 하며,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 학식경험자, 유통업단체, 식품가공·제조업단체, 농업단체 등의 대표자로 조직된다. 이 협의회가 주로 담당하는 것은 운동의 보급과 추진, 지역농축산물의 안정공급과 소비확대, 지역장려작물의 보급, 지역산업의 진흥, 친환경농업의 추진 등의 역할이다.

지역먹거리정책협의회는 지역의 먹거리 자립계획(지역순환 농식품체계 계획)과 지속가능한 먹거리정책을 논의하고 관련기관들이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우영균 외, 2009). 이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식량계획을 위해 교육, 포럼, 연구, 정책협의 등을 진행하며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에 정책



〈그림 5〉 나가노시의 지산지소운동 추진체계와 추진협의회

자 료: <http://w2.avis.ne.jp/~n~chisan/pdf/chisanchishoplan.pdf>

의 수립과 집행을 추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역먹거리정책협의회는 농민단체의 대표, 소비자단체의 대표, 협동조합관계자, 농식품유통업자, 농식품가공업체대표, 복지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지역순환 농식품체계 계획의 수립과 집행은 지역공동체의 교육, 의료, 산업, 행정, 복지, 문화 등 지역식량 체계와 관련된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역사회전체의 삶과 연동된 문제로 다루어져야 하고, 관 주도의 사업이 아니라 민관의 협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공공정책 차원에서 핵심적인 정책과제 두 가지를 언급해 보자.

첫째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로컬푸드) 농식품 공공조달을 통해 초기 시장을 형성해 주는 것이다. 현재 빠른 속도로 생겨나고 있는 지역산 식재료를 활용한 농식품 생산-가공-유통-조리 관련 사회적기업/마을기업/농어촌공동체회사 등이 느끼고 있는 가장 큰 애로사항이 바로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 문제이다. 충남 지역의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이 급식이나 공공조달 차원에서 지역산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정책을 시행하면 이러한 주체들의 안정화와 활성화 효과를 바로 가져올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학교급식에서의 논의 지평을 공공급식(특히 사회복지시설급식)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일단 그러한 단추가 꺾어진다면 병원이나 대학 등의 대규모 단체급식에까지 확장될 여지는 충분하다.

둘째는 로컬푸드 활동에 대한 시범적인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지자체에서는 민간 주도에 의한 다양하고 복합적인 로컬푸드 활동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제도적인 차원의 지원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가장 기본적인 로컬푸드 수단인 농민장터조차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범지원사업을 통해 초기에 이러한 수단들을 정책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V. 맺 음 말

로컬푸드운동은 자본에 의해서 단절된 ‘농’과 ‘식’의 관계를 복원함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회복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역의 복원과 자립을 실현하고, 지역의 제철농산물의 맛을 느끼고, 활력이 넘치는 지역사회를 구축할 수 있다.

로컬푸드운동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과거의 ‘신토불이(身土不二)식 운동’은 철저하게 지양되어야 한다. 신토불이운동은 단지 국내산 농산물의 이용을 강조하는 개념에 불과했다. 무엇을 어떻게 만들었는가는 묻지 않고, 단지 “우리 땅에서 난 먹거리가 우리 몸에 좋다”는 식의 감상적인 접근은 그 내용이 가지고 있는 고상한 철학적 의미와는 상관없이 운동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다. 그렇기에 ‘신토불이’를 주창한 농협의 매장에 수입산 농산물이 버젓이 활개를 치는 우스운 꼴이 연출되었던 것이다.

아울러 지역의 품목별 생산현황을 파악하여 로컬푸드운동의 출발로 삼을 핵심품목을 무엇으로 설정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지역의 다양한 수요에 상응하는 다품목생산을 유도해야 한다. 또한, 농민과 소비자 사이에 소통의 확대를 꾀하는 구체적인 작업을 전개함으로써 먹거리의 생산으로부터 철저하게 유리되어 있는 도시민들이 먹거리에 대하여 올바르게 인식하도록 하는 일도 중요하며, 지역의 생산자, 소비자, 자치단체 등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야 한다. 개별 생산자와 소비자가 분산되어 있는 상태에서 동력을 만들어내기 힘들기 때문에 마을별, 품목별로 생산자조직을 묶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협의체를 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참고문헌

-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2010. 8. 24), 「충청남도 지역먹거리체계 도입에 대한 소비자·생산자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 김종덕(2009), 「천안의 지산지소운동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학』, 10권 2호, 지역사회학회.
- 김철규(2008), 「현대 식품체계의 동학과 먹거리 주권」, ECO, 12(2), 7-32.
- 김철규(2009), 「2008축산물집회와 먹거리정치」, 농촌사회, 19(2), 37-67.
- 김흥주(2009), 「학교급식운동을 통한 지역먹거리체계 구축방안」, 농촌사회, 19(2), 63-92.
- 박진도(2009), 「지역농업 조직화와 지자체의 역할」, 국회사무처, 지역농업활성화를 위한 조례 연구.
- 박진도(2010.11.25), 「민선5기 지역발전과 로컬푸드」, 로컬푸드 전국대회 in 원주 자료집(2010.11. 25).
- 윤병선(2007), 「일본 지산지소운동의 현황과 과제」, 한국농촌사회학회 정기학술대회.
- 윤병선(2008), 「세계 농식품체계하에서 지역먹거리운동의 의의」, 『ECO』12-2, 한국환경사회학회.
- 윤병선(2009), 「지역먹거리운동의 전략과 정책과제」, 농촌사회, 19(2), 93-121.
- 윤병선·유학열(2009), 「로컬푸드의 실태와 충남의 실천과제」, 충남리포트, 22호.
- 윤병선·우장명·박대호(2010), 「지역먹거리운동의 가능성과 과제 - 청주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산업경제연구, 23(2), 975-999.
- 우영균·윤병선·김용우(2009), 「원주 로컬푸드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
- Sonntag,V.(2008), 「Why Local Linkages Matter」, Sustainable Seattle.
- 永木正和(2008), 「日本における地産地消の現状と課題」, (<http://www.jaec.org/event/forum/h19chisan/h19n.pdf>).
- 池本廣希(2008), 「地産地消の経済学」, 新泉社.
- 矢口芳生(2006), 「共生農業システム成立の条件」, 農林統計協會.